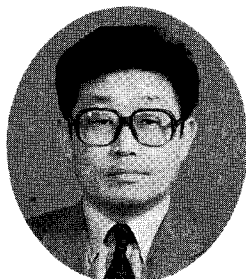


달러부족과 한국농업

해외의존보다 국내 자원활용으로 농업체질 개선해야

미 국 달러화의 부족으로 우리나라 국민과 경제가 고통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달러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달러는 국제간 모든 거래의 결제수단이다. 그래서 국가들은 달러모으기에 분주하다. 그런데 달러는 너무 많이 들어와도, 또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된다. 달러가 부족하면 달러값이 오르게 되고 수입원자재와 수입품 가격도 일제히 오른다. 반대로 달러가 너무 많이 유입되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국내물가를 상승시키게 된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달러부족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달러보다 유출되는 달러가 너무 많아 적정달러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작년 연말에는



장 제 우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70억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1996년 연말 보유액인 330억달러와 비교하면 1년동안 무려 260억의 달러가 더 빠져나간 셈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국가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달러를 빌려올 수밖에 없다. 국제금융기관에는 민간금융기관도

있고 IMF와 같은 국제기구가 있는데 민간금융기관이 달러를 빌려주지 않으면 공적인 국제기구로부터 달러를 빌려오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IMF경제이다.

'국가신용도' 높여야 달러 유입가능

그러면 달러는 어떻게 유입되고 또 어떻게 유출되는가. 달러의 유출입 경로는 크게 경상수지

(經常收支)와 자본수지(資本收支)로 구분된다. 경상수지는 무역이나 무역외 거래를 통하여 나타나는 수지이고 자본수지는 차입이나 투자를 통해 나타나는 수지이다. 그러나 달러부족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상수지에 의해 좌우된다. 예를들어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 달러부족은 겪지 않지만 적자를 기록하면 달러부족을 가져오기 쉽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5년도 경상수지가 약 9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듬해인 1996년에는 적자폭이 더 커져 237억달러의 막대한 적자를 나타냈다.

이와같이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내게 되면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거나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와 적자를 메꾸어야 한다.

경상수지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부터 달러를 많이 빌려올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충분하게 빌려올 수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그런데 외국달러를 많이 들여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국가신용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예를들어 국제사회에서 신용이 없는 나라로 분류되면 외국금융기관들은 투자나 대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달러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년전부터 시작된 기업들의 연쇄부도로 국가신용이 크게 추락하여 외국투자거나 외국계 은행들이 투자나 대출을 꺼리게 되었다. 심지어는 지금까지 투자해왔던 달러마저 회수해가는 상황이 되었다.



해외 의존도와 지불부담은 비례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외국에 지불할 달러가 부족하게 되면 달러값이 오르게 된다. 달러를 외환시장에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와같은 환율상승은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큰 국가일수록 수입대금 지불부담을 크게 한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곧 국내물가에 전가되어 국민들의 부담을 그만큼 크게한다. 특히 경제적 연관효과가 큰 원유를 100%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처지에서는 그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와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환율상승은 국가경제 전체에 파급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 농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

달러부족으로 겪게되는 고통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율상승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가상승이다. 환율상승분 만큼 물가가 오르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물가상승과 함께 경제정책의 조정과정에서 파생되는 간접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달러를 빌려준 국제금융기관들은 자기들이 빌려준 빚을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 채무국에 대하여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제체제 만들기를 요구한다. 그것이 이른바 우리나라에 대한 IMF의 요구사항이다. 저성장률과 고금리, 물가상승의 억제, 국가건축예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물가상승과는 별도로다시한번 충격

을 받게된다. 이것이 바로 달러부족으로 인한 2차충격이다. 예를들어 IMF약속에 따라 정부가 저성장정책을 유지하게 되면 모든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위축된다. 고이자율은 차입자들의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을 강요하게 된다. 그리고 긴축예산 역시 정부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축시켜 사업규모를 축소시킨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도 환율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IMF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정책 조정의 영향을 또 한차례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농업이 받게 되는 구체적인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과거 우리나라 농업은 생산과정에서 노동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었다. 그러나 노임의 상승과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노동행태의 변화로 농업생산과정은 기계화 과정으로 모두 바뀌게 되었다. 농업생산에 있어서의 기계화는 석유의 대량소비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의 농업은 그만큼 해외의존도가 높아졌다. 석유를 에너지로 하는 농업용비닐이나 농업용 기계류도 석유가격의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농약이나 종자가격도 대폭적인 가격인상이 예상된다. 축산업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축산은 원래 사료자급적 생산체제였다. 그러나 축산규모가 대규모화 되면서 사육과정에서 대량의 배합사료 사용으로 우리나라 축산은 농후사료 의존을 높혀가고 있다. 그런데 농후사료는 그 원료가 거의 모두가 외국에서 수입된 곡물들이다. 옥수수, 보리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수입사료 값이 오르게 되면 축산농가 부담이 역시 커지게 된다.

농업체질 개선만이 IMF극복 가능 유일 대안

다음으로는 IMF에 의한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영향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먼저 저성장정책은 농업투자를 억제하게 된다. 경제이론에 의하면 투자는 유효수요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높이는 요인이다. 따라서 정부가 저성장정책을 고수하려면 투자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 정부투자의 억제는 결국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예산의 삭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세출예산의 삭감은 지금까지 예정돼 왔던 농업사업을 크게 위축시키게 된다. 사업비 축소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주로 농업구조조정에 관련된 것들로 규모확대사업이나 기계화사업, 그리고 생산기반정비사업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고금리정책도 농업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IMF이전인 1997년 9월말 농협의 일반대출금리는 13.5%였으나 현재의 대출금리는 16% 수준이다. 올해 농가들은 2.5% 이상의 금리부담을 감수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물가억제정책도 농업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인플레이억제정책은 농산물가격 하락을 유도하게 되고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농산물수입도 예상된다.

이와같이 농업은 IMF사태로 생산비증가와 사업축소라는 양면으로부터의 공격을 받게된다. 그렇다고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기회에 과감하게 우리나라 농업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해외의존적 생산방식에서 국내자원을 활용하는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인들은 너무나도 '편안함'만을 추구해 왔는지 모른다. 그 결과 놀리는 땅이 많아지고 사료나 생산자재의 해외의존도도 높아졌다. 지금부터는 우리들의 눈을 국내, 특히 지역자원으로 돌리자. 이것만이 IMF를 벗어나는 길이다. **농약정보**